

“민주당, 13일까지 답 달라”… 설 연휴 전 합당 결론 낸다

조국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말라”
시한 통보하며 대표간 회동 제안
민주, 내일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으로 지지부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당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시한을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합당과 관련한 갈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가 직접 최후 시한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또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

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 갈등 격화를 두고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友黨)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인가”

라며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며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심지어 색깔론도 동원했다”며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확대하면서 국민의힘과 가장 앞장서서 싸운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밀약 내지 밀실 합당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밀약도 없었다.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밀약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가 가히 짐작이 간다. 거론되지도 않은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

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나오자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10일 재선 의원 모임 및 의원총회, 오는 12일 상임고문단 회동을 앞두고 있다. 해당 일정을 소화하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당 제의를 먼저 꺼낸 정 대표 측에서도 최대한 설 연휴 전에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명절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경우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 결정 등을 통해 ‘13일은 좀 빠르다.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15일이다, 20일이다’ (라고 제시)한다면 그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3선 도전 野… 탈환하려는 與 ‘격전 예고’

지방선거 돋보기

⑥ 제2의 도시 노리는 인천

인천 기반 중진급 정치인 다수 포진
원도심 개발·교통 인프라 구축 중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관심 받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는 인구 300만을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의 일꾼을 뽑는 인천시장 선거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인천시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넘겨 받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인천에 기반을 두고 오랜 시장 정치력을 해 온 중진급 정치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유정복 압승, 원도심 개발·교통 현안 떠오를 듯

현직 인천시장은 경기 김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는 재선의 유정복 시장이다. 지난 제8회 지선에서 인천 시군구 10곳 중 9곳에서 유 시장이 승리하며, 51.76%의 득표율을 기록했

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44.55%로 패배했다.

다만, 조기대선 후 1년만에 치러지는 지선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인천 국회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정면대결이 치러지며, 인천의 숙원인 원도심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의 현안을 공약화해 나오는 후보가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여권, ‘당심이나 명심이나’ 2파전 압축
민주당은 김교홍(3선·인천서구갑)의원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를 고심하던 정일영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대결은 당심과

명심(이재명의 마음)의 대리전으로도 불러 치열한 당 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김교홍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당원 1인1표제에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정 대표를 직접 만나 과천 서울경마장을 인천 강화도로 이전하고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존치하는 등 지역 현안을 담은 ‘인천발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일찍이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정청래 대표에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이 당 대표 시절에 같이 일했던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그 자리에서 “시장합니다”라고 농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합니다”란 말은 배가 고프단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박 의원이 농담으로 자신의 인천시장 출마 결의를 보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화답했을 뿐,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野 “유정복 3선 도전에 이학재 등판 설도”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유 시장의 대표 공약인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신혼부부용 천원주택,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재외동포청·고등법원 인천 유치, 청라하늘대교 개통 등을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시장이 1심 선고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 및 임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야당도 경쟁력 있는 다른 인천시

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내에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출마가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서·강화갑, 인천 서 갑에서 3선을 한 야당 내 대표적인 인천 출신 정치인이다. 최근엔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 이후 이 사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체급 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또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6월로 종료돼,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개혁신당에선 이기봉 인천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힘, 3·1절 새 당명 발표 예정… 尹 선고 이후 재정비

국민의힘이르면 오는 3월 1일에 새 당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당 전열의 재정비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7일)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3월 1일 정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복수 당명 후보군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달 초 당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서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혁신’, ‘보수’, ‘우리’, ‘함께’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많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명 개정 작업은 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타개책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당내 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론조사 상에서도 6·3 지방선거 구도가 야당에 불리하게 굳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서예진 기자